

# 중국의 다극화 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최 경 식\*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중국의 大戰略 및 多極化戰略
- III. 중국의 동북아 전략 및 한반도 정책
- IV. 다극화전략의 한반도 통일 적용
- V. 다극화전략에 의한 北核問題 해결
- VI 결론

## I. 문제의 제기

중국대륙은 면적은 유럽과 비슷하나, 인구는 유럽보다 4배나 많다. 민족 구성도 유럽만큼이나 다양하나, 분열되지 않고 ‘中華人民共和國’이란 이름으로 통일되어 있다

중국 대륙은 육지로는 북한·러시아·인도를 포함한 14개국과 접하고, 바다를 격하여 한국·일본·대만·필리핀 등 국가와 인접해 있다. 따라서 중국의 행위가 작게는 아시아 대륙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 극동대학교 중국어학과 중국학 교수, 한국군사학회 상근부회장

크게는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킨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당의 綱領은 중국의 헌법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이념이다. 당 策略은 국가의 정책과 방침이며, 당 序列은 국가 급 지도인물의 중요도를 반영한다.

중국공산당은 2002년 11월 제16차 전국대표대회(약칭 16大)를 개최하여 호금도(胡錦濤)를 정점으로 하는 제4대 영도집단을 선출함으로써 당과 국가권력 기관의 인선을 매듭지었고, 14大에 이어 또 한번의 순조로운 권력이양을 이루어 내었다. 현 추세라면 지금의 영도집단 체제는 2007년 제17大를 거쳐, 2012년 18大 전까지 거의 변동 없을 것이며, 정책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을 통치하는 중국공산당의 지도이념은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과 강택민의 ‘三個代表 중요사상’이라 할 수 있다. 모택동사상이 혁명과 건국·정치투쟁이념이라면, 등소평이론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식 평균주의 틀을 깬 선부론(先富論)이며, 강택민의 ‘三個代表 중요사상’은 시장경제 확대와 당의 문호를 개방하는 조처다. 胡錦濤 시대는 ‘삼개대표 중요사상’을 기조로 하되 ‘사상·이념·이론’의 속박에서 벗어나 오로지 富國強兵에만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제4대 영도집단의 출범과 아울러 이전까지 도광양희(韜光養晦)<sup>1)</sup> 책략에서 무실구시(務實求是), 유소작위(有所作爲)<sup>2)</sup> 책략(策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이제까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던 국제문제에서 지금부터는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면서 확실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나간다는 의지다.

중국 정권교체의 특징은 ‘禪讓’을 표본으로 하여, 民意보다는 黨

- 
- 1) 도광양희(韜光養晦):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밖으로 드러내진 않는다 즉 실력을 키울 때까지 은인자증한다는 뜻이다
  - 2) 무실구시(務實求實), 유소작위(有所作爲) 무실구시(務實求實)는 務實去華와 實事求是의 복합어로 실질을 강구하고 허영을 배격한다는 뜻이며, 유소작위(有所作爲)는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權을 장악한 뒤 ‘형식적 절차’에 따라 계승하는 것임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철학과 이념·사상, 대전략(Grand Strategy), 정책이 항상 일관되고도 분명하다. ‘중국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그리고 ‘중국의 대외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일관된 논리 하에서 고찰해야한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국가이익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대전략과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의 일부분이다.

중국의 對外戰略은 多極化戰略으로 표현되며, 이는 부국강병을 기반으로, 냉전 이후 미국 단극체제(單極體制)의 국제환경을 개선하여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사무에서 중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발전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다극화전략이 출현하는 증공 ‘16大보고’의 연구 분석에서부터 다극화전략의 상위전략인 중국의 대전략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중국의 다극화전략이 가지는 진정한 함의와 중국의 시각에서 보는 ‘대 한반도 안보관’을 분석하고,

셋째, 다극화전략이 한반도 통일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적용하는 가를 살펴본다.

## II. 중국의 大戰略 및 多極化戰略

### 1. 중국의 大戰略, 중국이 보는 국제정세와 對外業務

#### 1) 중국의 大戰略 및 설정과정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全國代表大會) 이후 당 대회 또는 증공00(大로 표기) 보고는 향후 5년간 당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중

국정책의 지침이기도 하다.

중공 16大보고<sup>3)</sup>에 의하면 중국의 국제정세 인식은 다음과 같다.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현 시대의 테마다. 평화의 유지와 발전의 촉진, 각국 인민과 관련되는 복지는 각국 인민의 공통적인 염원이며, 막을 수 없는 역사적 물결이기도 하다. 세계의 다극화(多極化)와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는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회와 유리한 여건을 가져다준다. 비교적 긴 시간의 평화와 국제환경, 양호한 주변 환경을 얻어내는 것이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국제정치·경제와 구질서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평화와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불확정적인 요소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비전통적인 안보위협 요소가 상호 교차하는 가운데 테러리즘의 위협은 증가되고 있다. 霸權主義와 強權主義가 새롭게 표현되고 있다. 민족 종교의 모순, 국경과 영토 분쟁으로 인해 일어나는 국부적 충돌이 수시로 일어나고, 南·北간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세계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인류는 수많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sup>4)</sup>

현 중국 지도층들은 국제정세를 '총체적으로 화평하나, 국부적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총체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국부적으로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국부적으로 혼란하다'라고 보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조류와 각국 인민의 뜻에 따르며, 정세에 따라 유리하게 이끌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정치 경제의 신질서를 적극 추진 구축해야 한다'(江澤民, 2003. 「江澤民論有中國特色社會主

---

3) 16大보고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상의 보고'의 약칭이다. 2002년 11월 8일, 중공당 총서기 강택민은 이 대회에서 "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이란 제목으로 보고(연설)를 하였으며, 이 보고는 다음 당 대회(2007년 11월 추정)가 열리기 전까지 중국정책의 가이드라인이다.

4) 16大보고 중의 제9단락 '국제정세와 對外工作' 부분의 요약

義」第522~523頁:人民出版社)라는 인식이다.

현 중국 지도층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평화와 발전’은 등소평의 ‘세계대전(世界大戰) 가피론(可避論)’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논리는 중국을 문화대혁명의 질곡(桎梏)에서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주장이었다. 이것이 당시로써는 논리적 근거가 희박한 일종의 모험적인 사유였으나, 중국의 개혁개방 30년이 되는 오늘 날 이것이 先見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또한 이 16大보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중심어(中心語)는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위대한 대부흥(大復興)’이다. ‘전면적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대부흥을 위해서이며, 중국공산당은 지금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대부흥을 실현할 장엄한 사명을 어깨에 짊어진다.’(江澤民. 「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 第56-57.2002:人民出版社) ‘중화민족의 위대한 대부흥’, 이것이 바로 향후 5년간 중국의 대전략 목표이다.

등소평 시대 때, ‘개혁개방으로 중국이 세계대국으로 매진하는 신국면을 연다.’라는 대전략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중화민족의 대부흥’을 제창한 것은 ‘중화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공산당의 당장(黨章) 제1조도 종전의 ‘중국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라는 표현 대신, ‘중국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인 동시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로 바뀌었다.

여기서 ‘中華民族’의 개념은 중국의 56개 소수민족을 한족(漢族)과 하나로 묶어 中華라는 틀 속에서 대단결을 도모하여 국가부흥에 매진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과거의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와 차별되며 중국 내의 모든 公民뿐만 아니라 해외 華人들까지 아우르고 있어 쇼비니즘(chauvinism)의 등장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 한·중간 문제시되고 있는 東北工程에는 소수민족 학자들을 대거 참가시켜 이이제이(以夷制夷) 방식으로 이민족의 역사를 소수민족 역사화

하고, 특히 조선족의 분리 가능성을 차단하며, 북한 유사시 연고권 주장을 열어두는데 있다.

‘평화와 발전’을 기점으로, 중국은 모택동시대 때의 ‘세계대전(世界大戰) 불가피론(不可避論)’과 ‘인민전쟁관(人民戰爭觀)’에서 벗어나 內戰, 建國과 권력투쟁으로 인해 피폐된 경제를 살릴 수 있었다. ‘世界大戰 可避論’은 무려 500만에 이르렀던 군대를 300만 수준으로 감축하여 현대화, 정예화, 첨단화 된 군대로 나아가도록 했고, 국방 건설 제일주의에서 경제를 국가의 중심에 둘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한 ‘평화와 안정’은 ‘중화민족의 大復興’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선결조건이 되었다. 중화부흥을 구체화 하는 장기적 전략이 바로 ‘3단계 발전전략[三步走發展目標]<sup>5)</sup>이며, 이는 향후 2050년까지 현대화를 완성해서, 종합국력 면에서 미국에 버금가며 명실 공히 세계 일류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야심 찬 전략이다.

냉전 후의 국제안보환경을 보는 중국의 시각은 이전의 전통적인 군사안보(軍事安保) 관념에서 종합적 안보 관념으로 변천되고 있다. 즉, 이제 군사안보는 경제건설을 위한 근본적 보장의 하나가 되었으며, 4개 현대화 건설(공업, 농업, 과학기술, 국방 현대화)을 위해서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거나 저지하는 수단이 되었다.

## 2) 중국 대외업무(對外業務)의 지향점

‘16대보고’에서 강택민은 ‘국제 풍운(風雲)이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우리는 시종여일하게 독립자주(獨立自主)의 평화외교정책을 수

---

5) ‘3단계 발전 전략<三步走發展目標>은 최초 덩소평이 구상하였으며, 제3대 영도집단에 의해서 일부 수정되었다. 내용은 2010년까지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며, 2020년까지 국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각종 제도를 완비하고, 2050년까지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달성하고 더욱 부강(富強)되고 민주, 문명된 사회주의 건설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속내는 종합 국력에서 2020년까지 일본, 2050년까지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이다.

행한다. 중국외교정책의宗旨(宗旨)는 세계평화를 보호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국의 인민과 함께 세계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아울러 중국의 대외업무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獨立自主·平和 외교정책의 기초 아래 역사적 조류에 순응하여 전 인류의 공동이익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서 세계의 다극화를 추진하고, 여러 종류의 역량이 병존케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안정을 도모한다.

② 공정 합리적인 국제정치와 경제의 신질서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정치적으로 상호존중 협상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영원히 확장을 시도하지 않는다.

③ 세계의 다양성 즉 문명과 사회제도의 이질성을 존중 보호하며,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발전 모델의 다양화를 인정함으로써,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④ 평화공존 5원칙(五項原則)을 기초로 선진국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며,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회제도나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고려치 않고, 공통이익의 接合點(接合点)을 확대하여 분규를 원만히 해결한다.

⑤ 제3세계와 단결 협력하며……또한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적극 참여하여 개발도상국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지지한다.

⑥ 어떤 형태의 테러리즘도 반대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발본색원하고, 테러활동을 예방하고 타격한다.

以上的 '16大보고'는 5년 전의 '15大보고'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차이는 크지 않으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보고의 제목부터가 '15大보고'는 '鄧小平理論(鄧小平理論)의 위대한 기치를 높

---

6) 평화공존 5원칙 중국이 1954년 6월 28일 중국-인도 공동성명 내용에 포함되면서 세상에 나왔고, 그 내용은 주권과 영토 상호 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이며, 이는 중국의 비동맹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의 골간이 되었다

이 들고, 21세기를 향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 추진 하자'였으나 '16大보고'는 '복지사회[小康社會]<sup>7)</sup>를 전면적으로 건설 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신국면을 열어나가자'이다. 즉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등소평이론'을 계승하되 초기 개혁개 방의 한계를 적극 극복하려는 의도다.

국제정세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15大'보고는 人權문제와 臺灣문제를 이용해서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도 군사충돌의 한 요인으로 보았었다. 그러나 '16大'보에는 人權에 관한 표현이 자제되었다.

'15大'보고'에서 '어떠한 강대국 또는 국가집단의 동맹에 동의하지 않고, 군사블록·군비경쟁에 참여치 않으며, 군사적 확장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대신 다른 나라가 그들의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를 우리에게 강요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 '16大'보 고'에서는 '집단동맹', '군사블록', '군비경쟁'이란 말이 빠져있다. 단 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영원히 확장을 시도하지 않는 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이는 중국도 이미 집단동맹이나 군사블록이라든지 군비경쟁에 뛰 어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며, 실제로 중국은 이를 시 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961년 북한과 체결한 '中朝友好合作 및 상호 원조 조약(군사력 자동개입 조항 포함)'은 아직까지 유효하 며, '5개국 국경협약'에서 발전한 '상해 합작조직(合作組織)<sup>8)</sup>은 중국

7) 小康社會 小康은 중국의 고전 시경(詩經)에 "民亦勞止, 尙可小康"에서 나온다 여기서 小康은 힘이 드니 '쉬도록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小康의 뜻은 바뀌 어 왔다 중국의 유학자들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大同이라 하고 그 중간 과정을 小康이라 했다 현재의 뜻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의식주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초보적인 복지사회를 말한다

8) 上海 合作組織은 '상해 5국'(1996.4.26 상해에서 조직)을 기초로 하여 2001년 6월 15 일, '상해 합작조직' 결성을 선포 기존 5개국에서 중국 북부지역의 중국과 국경을 접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몽고 등이 참가하고 있음 이 조 직은 중국이 주도로 조직한 최초의 국제조직임



의 북방국가들과 신뢰강화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사실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9.11사태 이후, 新疆이나 티베트의 분리 독립운동을 테러리즘으로 치부함으로써 이를 진압하는데 서방제국의 인권 시비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과거의 도광양희(韜光養晦), 화평굴기(和平崛起)라는 수동적인 정책에서 무실구시(務實求是), 유소작위(有所作爲)라는 비교적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실질 국력이 상승하고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른 완만한 변화임을 알 수 있다.

## 2. 중국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안보환경

중국 안보전략의 기본목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대부흥’을 위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쟁취하는 것이다.

### 1) 글로벌적 목표

중국은 공식적으로 전략적 억지능력-잠재적인 적대세력이 중국의 생존과 관계되는 이익에 위협을 가했을 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보유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전략 핵무기, ICBM를 포함한 첨단무기로 장비된 현대화된 군사력 배비를 뜻한다.

다음으로 중국은 세계의 다극화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를 ‘一超多強’으로 보고 있다. ‘一超’는 물론 미국을 지칭하며, ‘多強’은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와 EU, 일본이다. ‘多強’이 ‘一超’를 견제하여 多極化를 이루는 것이 중국이 바라는 세계질서 재편의 목표다

‘세계의 다극화는 강대국 상호 간에 서로를 적대국으로 여기지 않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공히 안정적인 쌍무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 모호성과 융통성을 가짐으로써 강대국의 야심을 약화시킨다. 또한 강대국은 관계가 최악에 도달했을 때도 관계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며, 심화된 경제의 상호의존과 국제기구도 강대국 관계를 안정시키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간의 영토확장은 현 단계에서 거의 통용될 수 없는 행위임으로, 국가 간의 경쟁은 국가 생존이 달린 경쟁은 아니다. 이로 인해서 다극화는 더욱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기구 결성을 요구하고 있다.’(唐世平. 2003. 「塑造中國的理想安全環境」,第88쪽: 中國社會科學出版社)

당세평(唐世平) 박사가 지적한 대로, 중국은 다극화가 강대국 간의 행동을 구속하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며, 다극화 국가 중의 어느 일방이 국가의 체면이나 신의 때문에 實益이 없는 곳에 분쟁에 말려드는 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강대국이 동맹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강대국으로 하여금 근신하게 한다는 인식이다.

중국 스스로는 ‘최소한의 전략적 역지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세계의 다극화에 주력하고 있다.

## 2) 지역적 목표

중국은 亞太地域 국가로써 중국의 국가이익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의 安全도 이 지역의 안보환경에 달려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다.

첫째, 위협으로부터 중국의 경제적 기초를 보장한다. 중국의 국가 중심은 경제이며, 중국경제의 명맥은 중국 연해지역에 있다. 중국은 연해지역에서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미국과 일본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역지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 미 일 관계가 적어도 적도 우군도 아닌 관계를 바탕으로 중 미·일간의 안보협력을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중·미·일 삼각관계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구도이다.

둘째,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한다. 중국은 대륙국가 중의 하나로 지상의 안보는 중국 안보의 근본이다. 지상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러시아며, 중국은 이 러시아가 적대국으로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중·러 양국 간에는 천연적인 장벽이 없어, 양국이 화합하지 못하면 모두 전략적 지위가 크게 약화되고, 반대로 양국이 화합하면 전략적 지위가 대폭 강화된다 과거 중·소 분쟁이 증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러시아와 동부지역의 국경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나아가 러시아·하자크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크스탄 등과 ‘군사 분야 신뢰강화 협정 국경조약(96 4)’, ‘국경지역 군사력 감축 협정(97 4)’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다른 12개국과 차례로 국경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20,28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최종 확정하였다

셋째,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국토통일을 달성한다. 대만문제는 대만의 전략적 위치뿐만 아니라 중국의 ‘체면’이 걸린 문제다. 대만문제를 비롯한 티베트문제 등은 西方의 ‘西化, 分化, 人權’이라는 미명 하에 중국을 압박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주권문제와 영토의 완성(完整), 국제적 안전을 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하는 관건적인 문제다

중국은 대만문제 해결에서 가장 큰 장애를 미국이라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의 방법으로 대륙과 대만이 통일되기를 희망하며, 통일된 중국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세 가지 목표는 중국의 이상적인 안보환경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현실적 목표이나, 분단보다는 통일이 大勢라면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통일 후의 한반도가 어느 일방과 군사동맹을 맺을 경우 다른 일방의 안보적 어려움을 초래한다. 4대강국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 후의 한반도가 어느 일방의 세력범위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4대강국의 지지를 받는 중립적인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다준다. 중립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통일은 통일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4대강국 간의 다자협력의 좋은 선례로도 될 수 있다. 이것이 중국의 인식이다. 따라서 중국이 추구하는 동북아 지역의 가장 이상적인 안보환경은 중립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이다.(唐世平. 2003. 「塑造中國的理想安全環境」, 第91쪽: 中國社會科學出版社)

다섯째, 중국은 ASEAN과 더욱 광범한 협력을 모색한다. ASEAN은 동남아의 평화와 자유, 중립을 주장하면서 가입 국가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ASEAN과 '중국·ASEAN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협력동반자 관계를 확정하였고, 또 일본과 한국이 참여하는 "10+3"의 구조 내에서 협력하고 있다.

ASEAN에서 중국이 역점을 두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3국이다.

여섯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해 지역의 종교 과격주의, 분리주의로부터 중국 서부의 안전을 보장하며, 필요 시 이 지역의 에너지 공급원을 획득한다. 즉 회교과격주의의 역량 억제와 이 지역에서 이익 충돌로 인한 중·러 간 동반자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며, 중국의 '서부대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국이 이 지역에서 추구하는 목표다.

일곱째, 서남아시아에서 인도와 파키스탄과 원만한 관계를 가진

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인도와는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티베트문제와 관련하여 인도를 우호국가로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대인도 전략의 핵심이다.

여덟째, 중동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한다. 미국과 영국이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걸프해역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틈바구니에서, 중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통해 ‘최소한도의 힘의 균형(minimal balance of power)’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Ⅲ. 중국의 동북아 전략 및 한반도 정책

#### 1. 중국과 남북한 관계 略述

‘한반도는 중국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수렁이다. 중국은 이 수렁에 들어가서 많은 대가를 치른 적이 있다’(叶自成.2003. 「中國大戰略」第349쪽: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사실 중국은 隋와 唐, 元, 明, 淸 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高句麗, 高麗, 朝鮮과 은원(恩怨)의 관계를 맺었고,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한반도가 분단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의 부산물로 대만이 미국의 통제 하로 들어가, 세계적으로 미 통일 국가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 냉전에서부터 탈냉전의 오늘날까지 중국은 한반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는 得보다 失이 많은 상태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동북아지역에서 多極化를 이루느냐 하는 바로미터이다. 중국은 남북한 모두와 외교관계를 가지면서 다시금 한반도라는 수렁에 빠지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조심스런 행보를 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의 수교이후 중국에서 나타난 외교행태에서 읽을 수 있다.

중국은 북한과 1949년 10월 6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현재까지 우여곡절은 겪었으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즉 ‘순망치한(唇亡齒寒), 보차상의(輔車相依)’의 관계다

특히 21세기 들어, 중·북한의 관계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가져왔다. 2000년 5월과 2001년 1월, 2004년 4월, 2006년 1월, 북한의 김정일은 계기 때마다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도 2001년 9월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강택민에 이어 2003년 10월,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인 오방국(吳邦國)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중국은 한국과 1992년 8월 24일 수교한 이후, 양국 관계는 최초에는 경제를 중심으로, 현재는 전 분야에 걸쳐 발전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후, 2000년 당시 주용기 총리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전면적 협력의 새로운 단계를 향한 추진’으로 합의하였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은 중한관계와 한반도의 정세, 북한 핵문제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쌍방 무역이 5년 내 1,000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 등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중국이 추진하는 외교의 단계 중 최고 단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보다 한 단계 아래의 단계로 중국에 있어서 한국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상호 적대관계에서 공동발전의 이웃’으로 발전된 전형이다 즉, 상호적대(相互敵對)-상호억제-상호 불대화(不對話)-상호 불승인-상호승인-관계정상화-상호협력-양호한 동반자 관계로 급속히 발전한 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다.

중국은 북한을 전통적 안보 파트너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전수해주는 대상국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꾼’으로 생각하

고 있으며, 한국을 경제 파트너에서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여기면서, 남북 쌍방에 영향을 주는 국가로써의 전략적 우세를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

## 2.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특수 입장

어떤 국가가 국제문제에서 발휘하는 역할은 그 국가의 종합국력과 그로부터 결정되는 국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며,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영향력은 국제적 지위에 부가하여 그 국가와의 地緣,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제요소가 복합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은 위의 제 요소와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영향력의 強度는 중국의 종합국력과 국제사회에서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정치와 경제 양 방면에서 대국임에 틀림없다. 현재 중국의 종합 국력은 세계 5~6위를 점하고 있다. 부가하여 지리, 역사, 문화 등 각 방면의 우세를 더하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먼저 한반도 안보문제에서 특수지위는 지리적인 것에서 결정된다. 周知하다시피, 한반도는 육지와 바다로 중국의 東北과 華北, 華東과 접한다.

군사 지리적 각도에서 보면, 적대국이 한반도를 이용하여 수개의 방향에서 중국을 향해 공세를 취한다면, 위 지역들이 직접적 위협의 대상이 된다. 역사적으로, 외부세력이 중국을 침략하고 중국을 위협하는 발판으로 한반도가 이용된 적이 있다 일본이 한반도를 교량으로 삼아 중국의 동북을 장악했고, 나아가 전면적으로 중국을 침략했었다. 한국전쟁 중, 미국이 조중(朝中) 국경지역으로 전쟁을 확대하자, 중국은 직접 안보의 위협을 받았었다.

만약 러시아 극동과 한반도가 중국의 적대세력이 되고, 황해가

그 적대세력에 의해 장악된다면, 중국의 동북과 화북은 육지와 바다 양 방면에서 포위되며, 산둥반도에 적대세력이 상륙한다면 동부 연해 공업도시와 北京이 크게 위협받는다 따라서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중국의 안보에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은 한반도 안보에서 역사적으로 특수한 지위에 있다. 20세기 중반 이전의 역사는 차치하고라도, 중국과 북한은 건국 시부터 社會主義 진영의 일원으로 ‘抗美援朝’를 비롯하여, 냉전 시 상호 지지를 통해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온 반면에 한국과는 적대시 했었다

戰後 한반도가 반세기가량 ‘冷 平和’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일면 중국의 역할도 작용했다. 근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대소사건에서 모두 모종의 역할을 했다. 역사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도록 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셋째로 국제적 현실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안보문제에서 특수 지위를 갖도록 했다.

제2차 대전 종료 후,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약 40여 년 동안 아 태지역은 중국을 위주로 볼 때 대개 5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쳤다. 제1단계는 ‘전후(戰後)부터 중국 공산당이 중국대륙을 통일한 시기’이고, 그 다음이 ‘중미 직접 대항 시기’, ‘미 중· 소 삼각구도 형성시기’, ‘미 중· 소 삼각관계 발전시기’, ‘미 중 소· 일 사각구도 형성시기’로 나누어진다.(陳峰君主編 1999 「冷戰后亞太國際關係」 第2~3쪽:新華出版社)

냉전 시기 중국은 미 소구도 속에서 하나의 종속변수에 불과했으나, 냉전 종료 후, 소련의 해체와 국력상승으로 아 태지역에서 중국의 지위와 발언권이 제고되어, 중국은 미국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누리는 특수한 지위는 어느 한 요소로



인해 생성된 것이 아니고 바로 지리,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일어난 결과다.

### 3.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기본 입장

‘중화민족의 대부흥’이라는 대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변 환경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안보이익과도 관련된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自主, 平和, 統一을 강조하고 있다. 自主는 바로 외세개입, 즉 미국의 역량 축소를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통일보다는 평화와 안정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둔다

중국은 남북 쌍방이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를 주장한다. 중국은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해왔다. 1958년 중국은 북한에서 군대를 철수했고, 1994년 2월에는 북한의 건의를 받아들여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의 대표도 철수했다 이후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일관되게 남북 쌍방의 자주권을 존중하여, 먼저 남북 쌍방 인민의 뜻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를 바랐다. 중국은 동시에 다른 나라도 한반도 남북의 의지와 선택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랐다. 중국은 내정불간섭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인 조중(朝中) 우의를 견지함과 동시에 한중 우호 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여기서 조·중간의 전통적 우의는 정치적, 안보적 차원이며, 한중 우호는 경제적 호혜원칙을 주로 일컫는다. 즉 하나는 명분이요 다른 하나는 실리다. 중국은 남북 쌍방을 지지하면서 적극적 뜻을 가진 행동이나 유효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중국은 거의 보류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胡錦濤 시대로 들어서면서 한반도문제에도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즉, 有所作爲 책략에 의한 정책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각국이 협력하여 동북아 지역 안보체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이것이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지역 질서보다는 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의 이익에 있어서 더욱 부합된다는 인식이다.(張蘊嶺主編.2003.「未來10-15年中國在亞太地區面臨的國際環境」第361쪽:中國社會科學出版社)

이를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적극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토록하고 북한이 지역 협력체제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 4. 중국의 대 북한 평가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한을 평가함에 있어 공개적인 것과는 달리 아주 냉정하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존재는 바로 ‘계륵(鷄肋)’과 같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2001년 연말에 낸 중국의 한 비밀 보고서 일부를 인용한다.

‘2001년 북한의 식량은 150만 톤이 부족했고, 공장 가동률(稼動率)은 30%미만이며, 경제성장률은 0~1%정도다.……김정일은 연초에 新 思考를 내세워 上海를 방문함으로써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유지이며, ‘先軍政治’다.……’

‘김정일의 방중과 강택민의 방북은 중조(中朝)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진일보 증진시켰다. 그러나 강주석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의 중국의 열기는 김정일의 방러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았다.……대미관계는 부시정부 등장 이후 악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아프간 사태가 종료되면 타격해야 할 대상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위의 평가에서, 중국은 체제의 위협 때문에 개방할 수 없는 북한

의 실정을 摘示했고, 김정일의 實益없는 러시아 방문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 반해, 실익을 주고 있는 중국에 대해 특별한 반응이 없자, 북한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sup>9)</sup>

남북대화 문제에서 중국은 북한의 착오를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먼저 북미관계를 해결한 이후, 이에 의지하여 남북관계를 해결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한발 물러서 남북관계를 통하여 북미관계 해결을 시도하여 현재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보완 발전하고 있다.……북한이 당초부터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남북화해와 협력교류를 밀접히 한 후, 한국과 상호 배합하여 미국에 대해 압력을 가했더라면,……미국 역시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어 북한과 대화하고 관계를 개선했을 것이다.……반대로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태도변화를 요구했으니 결과는 반대로 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에 앞서 한국과 대화하고 협력을 우선했어야 하는데, 미국과의 대화를 主, 한국과의 대화를 從으로 한 것이 전략적 착오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북한의 남북대화에 대한 작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필요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차가워졌다 더워졌다, 나타났다 들어갔다, 입으로 “예스” 속으로 “노”, 겉으로만 좋은 체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부당한 작태를 맹목적으로 따를 수 없으니, 답판은 결렬되게 마련이다.’

중국은 2002년도 북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김정일은 체제붕괴를 우려하여 대폭적인 개혁개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을 탈피하기는 곤란하다.……북한은 중국에

---

9) 김정일의 방러 직후, 중국군 정보 고위관리와 대담자리에서 필자가 김정일의 방러 성과를 질문하자, “없는 자끼리 협력해봐야 서로 요구만 많지, 서로 도와줄 것은 없다.”라고 북한 러시아 간의 협력전망을 단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다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과 관계가 밀접한 반면, 북한과 같이 결사코 미국에 반대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이 있고,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대북 원조도 마음에 두고 있다.……미국의 강경정책에 대해서 북한도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테러국 명단에 북한을 삽입시킨 것은 북한을 타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산진호(蔽山震虎)”로서, 북한으로 하여금 경거망동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다.……미국은 중조조약 중 군사조약을 고려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어 최고위층에 대한 건의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 비록 중국에 대해 옹여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능력껏 원조해야 한다.……기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도발의 위험성을 인식토록 해야 한다……우리의 개혁개방의 경험을 주동적으로 선전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반감을 사고, 내정간섭이라는 인상을 주어 양국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중국은 남북한 공히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유리한 입장을 이용하여 남북대화를 고무 찬양하고 남북화해와 협력 교류가 남북의 자주·평화·통일에 유리함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중국은 독특한 건설적인 작용으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를 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2001년 말 중국공산당의 대북정책 연구팀이 작성한 비밀보고)

실제로 중국은 이 보고서에서 적시한 대로 남북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유리 공 다루듯 조심하고 있다.

## IV. 다극화전략의 한반도 통일 적용

### 1.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주는 계시

‘냉전시대, 한반도는 동서 양 진영 대치의 축소판이었으며, 냉전 종식 후, 특히 독일 통일 이후, 한반도에도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나타났다. 그러나 통일 독일에게 지워진 거대한 경제적 압력이 갈수록 두드러지는 현상에서,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갑작스런 통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압력은 막 신흥공업국가의 반열에 진입한 한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Shiping Tang, Fall/Winter 1999. "A Neutral Reunified Korea : A Chinese View "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XIII, pp. 464~483)

중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가 평화통일로 가는 역사적인 제일막이며, 이로 인해 동북아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반도 미래의 발전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은 베를린 장벽 붕괴보다 못하지 않는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이다. 비록 남북정상회담 후, 쌍방 화해의 진척은 부시 정부의 강경정책 및 9.11테러 후 국제정세의 돌변으로 예상보다 더디나, 한민족의 통일을 향한 보폭은 일반의 예측보다는 빠를 것으로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사실 한반도의 정세완화와 발전은 동북아 지역에 오래도록 유지해오던 현상을 타파하는 것을 의미하며, 域內 제국은 장차 역학구도에 대한 정책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도록, 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의 구도를 필요로 했다

## 2.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핵심국가들의 선택과 결과 예측

### 1) 중국이 보는 미국의 대 한반도 통일정책

중국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상당히 난해한 분석이지만 자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옹호하고 부화(附和)하기에 능숙한 중국학자들의 견해는 대개 다음과 같다.

‘동북아 문제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은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계속 미군을 주둔시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전략적 우세를 달성하느냐와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과 한민족이 역사적·문화적인 관계로 인하여 또 다시 중국의 세력범위로 귀속되느냐 는데 있다.’

‘한반도의 통일이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군을 의미한다면,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연 또는 방해할 것이다.’(唐世平, 2003. 「塑造中國的理想安全环境」, 第99쪽.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중국이 판단하는 미국의 우려는 통일된 한반도가 韓民族의 민족주의를 강렬히 자극하고, 그 창끝을 미국으로 돌려 한반도의 미군 주둔을 원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에서는 1980년 이후부터 젊은층과 지식층을 중심으로 반미감정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1995년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미국이 일본과 북한에 이어 제3위를 차지했으며(Gi-Wook Shin, August 1996. South Korean Anti-Americanism. A Comparative Perspective Asian Survey, Vol.36, No.8. pp. 787~803)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반미감정을 더욱 조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비록 미국이 한국에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가는 중국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실은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로 보고 있다 특히 부시정부의 김정 일에 대한 불신과 대북강경책 등을 들고 있다.

중국은 부시의 대 북한 강경정책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나는 한반도 쌍방의 화해를 지연시켜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이용하여 계속 TMD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대 한반도 통일정책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 2) 중국의 대 한반도 통일정책

소련이 해체된 후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되었으나 중국은 한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중국은 삼각점의 한점이 되었을 뿐이었다.'(이홍영 등. 1993. *Korean Options in a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pp. 5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그러나 기타 국가의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지지로 인해 미래 상당 기간까지도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남아 있을 것은 틀림없다.

중국은 유일하게 남북 쌍방을 우호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로써, 상당히 가치 있는 전략적 자원을 장악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 자원을 어떤 전략적 목표에 이용하지 않고, 오랜 기간 피동적인 방관자 노릇을 하여왔다.

唐世平 박사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열거했다. 이것이 중국정부나 중국학자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통상적인 기류임은 분명하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외교정책에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꼽고 있다. 냉전시기에는 그러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 부분이 거의 없어지고, 오로지 국가이익에 기초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반도의 통일로 한국이 북한지역의 재건에 진력함으로써 대 중국 투자가 감소되리라는 우려다. 이런 견해도 한국의 투자는 2000년 현재 외국인 직접 투자 총액(대만과 홍콩 포함)의 3~4%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전체 경제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은 적다. 사실상 한반도가 실질적인 통일단계로 들어갈 즈음에는, 중국도 통일 후 한반도의 건설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경제적 능력을 구비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통일 후 한반도의 정치적 방향, 특히 중국의 안보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최종적 목표는 중국을 포위하려는 것이며, 미국은 이미 중국의 주변 도서를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부시정부의 정책은 이런 관점을 더욱 확실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중미관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 하에서, 만약 통일된 한반도가 여전히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면, 중국은 비록 분열된 한반도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 하더라도 통일 후 미군이 주둔하는 한반도 보다는 중국에게 더욱 유리하다’

‘현재와 같이 중·미 사이 내지는 중·일 사이의 완충지대는 중국이 거대한 대가를 치르고 쟁취한 것으로 중국은 미래에 어떤 보장도 없는 상태에 이를 두 손 받들어 미국과 일본에 헌납할 수는 없다.’ (唐世平, 2003. 「塑造中國的理想安全環境」第102쪽.中國社會科學出版社)

결국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주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동북아에서 중국의 역할이 축소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자체도 통일이 大業인 것과 같이, 한반도의 통일도 역사적인 필연이라 인식하고 있음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피동적인 관망의 태도만 견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중국이



장악한 전략적 자원은 결코 장기적 증식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시간의 추이에 따라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중립적인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원했을 경우, 통일 후 한반도에 대한 ‘持分’이 강화되고 동북아에서 ‘多極化’를 이루겠다는 진정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모두 한반도의 통일을 추진하는 데는 강렬한 염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 배후의 원인은 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존재하는 심각한 상호 불신과 관련된다.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통일이 한반도에서 미군 축출로 이어질 가능성과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우세의 감소 내지는 한반도가 다시 중국의 세력 판도내로 귀속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에서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주저하는 하는 이유는 통일이 되더라도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지 않을 까 하는 우려이며, 이렇게 되었을 경우 분열된 한반도 보다 전략적으로 더 불리하다는 데 있다. 통일 후 한반도의 전략 방향이 많은 불확실성을 가질 때, 중미 양국이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우려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게 되고 현상유지에 만족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중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제로 섬 심리상태’와 ‘최악의 결과를 예측하는 심리상태’에서는 쌍방의 ‘최상의 전략 (dominant strategy)’은 바로 비협력(非協力)이다.

한반도가 중·미 양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상호 미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의심이 더하여져, 중·미 양국 모두는 한반도 통일 후 수반되는 전략적 이익의 재분배 가운데서 각자의 상대적 득실을 마음에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일부 중국학자들 사이에서, 만약 미국이 통일 후의 한

반도에 미군 주둔을 계속 고집한다면, 한민족의 민족주의의 분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불안의 씨앗을 묻어 놓는 것과 같다는 ‘반미감정’ 조장과 함께, 통일 후의 한반도로 하여금 미·일의 군사동맹에 가입토록 요구하는 것은 명확히 중국을 적대국가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통일 후의 한민족은 민족주의의 고양으로 인해 중국 경내(境內)의 조선족 집거지에 대한 영토 요구나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간섭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중국과 러시아 동포가 제외된 <재외 동포법>이 불평등하다고 판결을 받은 후, 중국과 러시아 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이 2004년 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중국정부는 중국 조선족의 이중국적 문제로 알력을 빚었으며, 중국은 조선족을 위협스런 소수민족 중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의 고구려사 문제도 중국이 조선족과 한국을 길들이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 3)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선택

중국은 남북 쌍방이 중립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의 도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가 새로운 사고를 가져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운명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강대국이 아닌 남북 쌍방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쌍방은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진일보하여 자신의 自主性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통일과정을 강대국이 주도하는 진흙탕이 아닌 남북 주도의 궤도로 진입시켜야 한다. 한국은 ‘한·미·일 협조체제’는 사실상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 한반도의 통일과정을 방해한다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협조체제는 한편으로 한국의 행

동 자유를 크게 구속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우려를 깊게 하여 남북 쌍방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민족화해의 노력을 대대적으로 감소시킨다. 어떤 의미에서 한반도 문제를 협의할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은 남북 간이요, 중 미간이지, 한 미·일간의 협조는 아니다 라고 강조한다.

바로 ‘自主性’을 이용한 한국과 미·일 간의 틈새를 넓히는 책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부시정부의 강경정책에 부응하기 보다는 남북 쌍방이 주도적으로 접촉하여 남북 쌍방의 화해가 가속화 되면 미래의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은 냉담한 태도 또는 적대시하는 태도를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한민족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金熙德, “南北峰會以來的朝鮮半島局勢”, 「當代亞太」2001年第10期, 第3~8頁。)

중국은 또한 한국 정치가들은 사상과 언론의 금기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장차 한민족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이익 내지는 일본의 지역이익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포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안주하기 위하여 통일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남북 쌍방은 가능한 빨리 한민족이 통일 후 한반도는 중립이라는 것과 통일을 방해하거나 통일 후에 한반도를 자신의 세력판도로 끌어 들이려는 어떤 강대국도 한민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선포해야 한다.’(唐世平, “塑造中國的理想安全環境”, 第111쪽,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年 12月。)

바로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남북이 1972년과 1992년에 통일에 관한 성명과 선언,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중요시 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줄곧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인이었다. 김정일은 남북 정상회담 며칠 전에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고, 이를 계기로 방중이 '쇼킹한 뉴스'에서 '일반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V. 다극화전략에 의한 北核問題 해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6자회담'이 바로 동북아시아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국의 다극화전략의 일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 중국이 보는 북핵문제의 원인

북한 핵 위기는 2002년 10월, 북한의 부외상(副外相) 강석주가 평양에서 미국 대통령 특사 겸 국무성 보좌관 켈리와 담판을 할 시, '미국의 가증스런 핵 교살 위협에 맞서, 주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보다 더한 무기를 가질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북한은 미국을 향하여 핵개발을 중지하는 3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발단되었다.<sup>10)</sup>

미국정부는 켈리가 귀국한 후 이 사실을 대내·외에 선포하자, 세계는 경악했다. 미국은 북한이 이랬다저랬다, 제 마음대로, 전혀 신의가 없으며, 명확한 핵 위협이라면서, 2002년 11월 14일, 12월부터 북한 제공 유류를 중지한다고 선포했다.

---

10)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3가지 조건은 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말 것. ② 북한과 상호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것. ③ 북한의 현 체제를 승인할 것 등이다

북한도 이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핵 기본합의서> 無實化 시도로 2002년 12월 12일 북한은 핵 동결 해제를 선포하고, 핵 시설을 다시 가동했다. 이어 IAEA가 영변 원자로에 설치한 감시시설을 제거하고 원자로에 연료봉을 재 진입했으며, 유엔 감시단을 축출했다 2003년 1월 6일, 북한은 만약 미국이 핵 시설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궤멸적인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고, 1월 10일,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으며, 이어 <정전협정> 탈퇴 경고와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근해로 발사하여 일본을 놀라게 했다 4월 18일, 북한 외무성은 '8,000여개의 연료봉에 대해 최후의 재처리를 하고 있다'고 선포했다.(李愼明、王逸舟主編, 「2004年:全球政治与安全報告」, 第164~165頁,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年1月。)

북한의 이런 강경한 태도에 대하여, 미국은 채찍과 당근정책을 병행했다

미국 朝野는 이것을 핵 공갈로 간주했고, 부시정부는 김정일을 사담 후세인과 비교했다.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동시에 두개의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이라크 전쟁 반 개월 전 3월 4일 B-1, B-52 폭격기 24대를 괄도로 옮겨 아 태 군사력을 증강했고, 이라크 전쟁 종료 후 북한에 대응할 준비를 했다. 3월 12일 미국은 북한의 동해에 대한 電子偵察, 3월15일, 이라크 전쟁 5일전에 미 핵 항모 '칼빈슨' 호를 부산으로 파견, 19~26일까지 RSOI 훈련(연례적인 전개훈련)을 실시하였다. 4월 19일, 이라크 전쟁이 종결되자마자, 미 국방부 관리는 '워싱턴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고려'하고 있으며 북한을 타격할 작전계획을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북한이 핵과 대규모 살상무기를 개발을 포기하고, 다시 <핵 기본합의서>로 돌아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를 희망했다. 부시 대통령도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나 타격할 계획이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근본적으로

포기하겠다면 미국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02년 11월 18일, 미 국무장관 파월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그리고 북한의 불가침조약을 체결 요구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미국과 단독회담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다자회담을 주장했다.

2003년 2월 23~24일, 파월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이 북한에게 미국이 다자회담을 원한다는 것을 전달해주기를 희망했다. 3월8일, 중국은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여 김정일에게 북한,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제의했다.

중국의 권고 하에 북한은 4월 12일 정식으로 태도를 표명하였다. '만약 미국이 핵문제 해결을 할 용의가 있어 대담하게 조선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면, 조선도 대화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이로부터 북한 핵 위기는 정치적 해결의 길로 들어섰으며, 2003년 4월 23~25일 '3자회담'이 북경의 조어대(釣魚臺)에서 열렸고, 이어 8월 27~29일에 동 지점에서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보는 '북한의 핵문제'는 약간의 시각차가 있다.

중국은 1994년 체결된 북미 <핵 기본합의서>는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이나, 쌍방의 이행 성의가 부족했고, 미국의 핵전략 조정과 이라크 전쟁 등 제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는 인식이다.(李愼明、王逸舟主編:<2004年:全球政治与安全報告>중, 第165~167쪽 요약 정리)

첫 째가 쌍방 간에 잠재된 신뢰의 위기로 인하여, <핵 기본합의서>를 집행할 성의가 결핍되어 있었다. 1994년 담판이 고착되어 있을 때, 카터의 알선으로 일시 화해는 되었으나, 이후 김일성의 돌연사(突然死)는 북한으로 하여금 정권유지에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고, 미국도 당시 이 정권이 곧 붕괴하리라 예상하고 협의를 달성하는

데만 급급했었다. 이 때문에 이후 쌍방이 협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KEDO를 조직하여 경수로를 건설해주기로 했으나 지지부진했다.

1996년부터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확산과 개발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이것도 <핵 기본합의서>의 틀 속에서 담판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도 미사일과 핵 개발 중지를 원하지 않았다. 1998년 8월, 북한은 사정거리 2,000km에 달하는 대포동(大浦洞) 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 하였을 때, 미국은 그 무기의 발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3,000km의 대포동 2호 연구 개발을 적극 저지하였다. 이외에 미국은 KEDO가 북한에 경수를 건설해준 후, 제련과정을 통해 핵무기용의 핵분열물질을 추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를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미국은 협의 달성 후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소하지 않아, 양국 관계는 안정된 궤도로 진입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1996년부터 북한이 미사일 기술 확산과 장거리 미사일개발을 지적하면서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여 양국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 진정으로 양국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대포동 2호 발사를 잠시 중지하기로 약속하면서, 2000년 10월 미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방문을 주선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면서 일어났다. 그러나 연말에 있었던 미 대통령 선거 관계로 클린턴의 방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시정부 등장 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9.11'테러 발생 후 양국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은 클린턴 시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부시정부에 이

르러서는 기존의 핵 정책마저도 단번에 변하였다. 부시는 2002년 1월 <핵무기 태세 평가보고>와 9월 <국가안보전략>보고에서 '선제 공격'을 주장하면서, 무력으로 세 '악의 축'을 변화시키려 했다. 이것으로 북한은 미국의 <핵 기본 합의서> 이행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2002년 10월 북미회담 시, 북한은 재차 핵 관련 정책의 추진과 핵무기를 개발하여 국가의 주권을 보위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미국에게 정식적인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게 되었다.

셋째, <핵 기본 합의서> 이전, 북한은 1993년 6월 11일, NPT 탈퇴를 중지하고 IAEA 사찰을 받았으나 6차회에 걸친 '특별사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미국은 이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북한이 핵을 은닉하고 있다고 여기고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핵 시설에 대해서 계속 사찰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이런 요구가 상당히 무리라고 여겼다.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사찰 요구는 尠 未申告 지하시설에 대한 끝없는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라크에 대한 핵 사찰 과정이 바로 북한의 우려를 입증하고 있었다. 더욱이 한반도 남북 쌍방은 군사적으로 긴장상태에 있었으므로,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핵사찰이 계속 진행된다면 북한의 수많은 지하시설, 예를 들어 지하공장, 무기고 등 국가의 기밀부분이 모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동의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상호불신으로 위기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유(重油)의 공급 중단과 북한의 KEDO요원 축출, 북한의 정식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2003년 1월 10일), 1994년 동결되었던 후연 핵원자로 및 기타 핵 시설 재가동,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 무효선언 등으로 연결되면서 북핵 위기는 고조



되었다는 인식이다

## 2. 북한 핵 위기에서 중국의 역할

### 1) 북한 핵 위기를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관계

중국의 역할을 유추하기 전에, 먼저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을 제외한 주변국의利害를 따져보아야 한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글로벌적 전략, 즉 ‘구아전략(歐亞戰略)’의 관점에서 처리하고 있다.

한반도는 미국이 극히 중시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미국의 원-원 전략 중 하나가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이 발표한 2001년 <4개년 방위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에서부터 서남아시아까지 한줄기 큰 반원을 그리고 있다 거기에는 동해-호주-뱅갈 만의 광역 수역이 포함되며, 이 지대는 역대의 세계 주요 역량들이 모두 통제하고 쟁탈하려던 지역이다. 이 선상에는 대만해협과 마젤란 해협 등 주요 전략적 요충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과 대만, 동남아 제도로 구성된 소위 ‘海島 방위 사슬’이 형성되어 있다. 동아시아의 이 사슬과 서아시아에서 남아시아에 이르는 사슬이 뱅갈 만에서 연결되며 북한과 함께 부시에 의해 3개의 ‘악의 축’이라고 불려진 이라크 및 이란은 이 선의 양 끝에 위치하고 있다.

한반도가 동북아의 핵심지역인데, 여기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다른 ‘악의 축’에 핵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초강대국의 체계모니 구도가 亂局으로 변하는 것을 미국은 두려워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장차 일본이 對稱戰力 확보수단으로 자체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TMD를 개발 당위성을 제공해준다.

1980년 초기, 북한은 영변에 원자로를 건설할 즈음에는 소련에 기술을 의지하였고, 더 많은 기술과 자금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약속하고 IAEA에도 가입했다.

80년대 말,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은 가장 중요한 외교대상으로 미국, 일본 및 한국으로 확정하고는 외교적 접촉을 가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한반도의 화해 진전은 순조롭게 진전되고, 남북 쌍방은 상호불가침과 화해협력 조약에 서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였다.

이런 정황 하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먼저 핵문제를 분명히 할 것을 강요했고, 일본 및 한국도 북한과 관계 개선 과정에서 ‘핵문제’를 우선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모든 문제가 핵문제로 집중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일본 및 한국,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그 관건은 미국임을 파악하게 되었다. 즉 핵문제가 북·미 사이에 주요 정치적 인 문제로 승격되었고, 오늘 날 북한이 미국과 단독회담을 요구하는 이유가 되었다.

한편으로 북한은 외교적 제스처를 통해 미국에게 화해의 의사를 전달하고, 남북정상회담, 한·미 일의 전략적 동맹관계 해체 시도, 러시아·일본 및 유럽과 관계 개선 등으로 고립을 탈피하고 국제사회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중국의 지지를 얻고, 중국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미국과 한국과 회담하는 카드로 사용하였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외교 책략과 노력을 통하여 생존공간을 확보하고 경제 원조를 얻음으로써 당면한 국내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은 김정일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예시한 것이 되었다.

‘이라크의 비참한 퇴장은 무기 사찰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어떤

사람도 조선이 추호의 타협이나 양보를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북한 「노동신문」, 2003년 3월 28일)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이라크 내에서 어떤 대규모 살상 무기를 찾지 못했다.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은 단순한 무기사찰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과 정치관계 문제였던 것이었다

이라크 전쟁기간이 북한에게 있어서는 미국과 흥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나, 북한의 손안에 남아있는 카드는 매우 제한되었다. 핵 계획 외에 미국과 흥정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어, 결국 ‘핵카드’를 다시 판위에 올려놓았다. 북한은 여러 차례 미국과 직접 담판을 요구했었다. 심지어 다른 나라의 알선까지도 거절하였다. ‘실사 남북화해 후에도 미국이 계속 한반도에 남아있기를 희망한다.’(중국 <北京青年報>, 2000年 8月 11日)라고 까지 말했다. 북한의 의도는 정치적 승인과 안보상의 보장, 경제적인 보상이다. 즉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주목적의 하나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국제사회의 더 많은 식량과 에너지 원조를 획득하며, 국제사회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문제 이후에 수반되는 한반도 통일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과의 관계는 일본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된다. 만약에 통일 이전에 일본이 북한과 어느 정도 협력하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장차 일본은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구도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되고, 나아가 동아시아 내지는 글로벌적 문제의 발언권에 영향을 받게 되며, 정치대국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본은 막대한 경제력으로, 북한이 경제적,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갑작스럽게 붕괴되지 않도록 하며, 한반도 통일이 한국 주도로 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2002년, 일본 고이즈미 수상이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고 돌연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일본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한 것이며, 이는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동·서독이 통일되기 직전에 동독을 방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李寒秋, <朝鮮半島地緣政治格局和外交戰略框架>, 轉引自: www. xslx. com )

또한 일본은 중·러 양국에 비해서 완충의 여지가 없다. 동북아 각국 간에 역사적 인식과 영토분쟁 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반드시 미국의 힘을 빌려 자신의 아시아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북한 핵 위기로 일어난 동맹이익과 자신의 이익의 딜레마 중에서 일본정부의 정책은 먼저 미국에게 양호한 조력을 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압력과 강경정책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해 무역과 금융·경제지원 중지로 압박하고, 미국, 호주 등 국가와 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제지하는 행위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이 북·일 협상의 유인책이면서 전주곡이 되고 있다. 2003년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일련의 담판과 협상 가운데서 일본은 줄곧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핵 비확산 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나아가 비무장 지대의 재래식 군사력 삭감 문제 등을 연계시켜 왔다.

한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줄곧 어려운 ‘줄타기 게임’을 하고 있다. 핵 위기는 한국전쟁 이래 한국이 부닥친 가장 어려운 외교적 난제요 나아가 통일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명제로 되었다.

한국의 현 정부는 미국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미 쌍방의 모순이 격화되어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은 첫 번째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핵 문제가 불거진 후, 줄곧 한국은 미국의 현행 ‘대북 특별 억제 정책’이 북한 경제의 붕괴로 유도되어

한반도 내에서 중대한 충돌이나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까 걱정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모두 북미 간의 극한 대립으로 한국의 햇볕정책이 유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핵 위기 가운데서 여러 차례 중국과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하여 지지를 획득하는 등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4년 핵문제가 불거졌을 때처럼, 우리가 제외된 채, 마지막에 가서 수십억 원의 경수로 비용을 대는 그런 짓은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한국은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던 간에 먼저 한국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 최근('06.9월 루마니아)에는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정치적 목적이다'라고 평가절하기도 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한국의 미래는 자주국방 능력을 기르는데 주력한다고 표명하였다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한국은 자신의 국방능력으로 국가를 보위해야 한다'

그러나 '自主'는 선언으로 될 수 없고, 군사력의 증강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며, 일정기간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2)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정학적 방면에서 보면, 한반도와 중국은 산수가 인접해있고, 한반도의 안정 여부는 남북 쌍방뿐만 아니라 중국 주변 내지는 전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北京六方會談中國代表團團長王毅接受新華社、「人民日報」、中央電視台、國際廣播電台、

「中國日報」聯合採訪, 2003年8月26日) 이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시중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며, 핵문제 처리에 있어서도 동일하다.(李愼明、王逸舟主編 ; 「2004年:全球政治与安全報告」, 第177頁,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年1月)

역사상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 출병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거나 '抗美援朝'<sup>11)</sup>를 한 적이 있다. 결과는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동북아 지역의 안전 구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도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해서 대규모의 병력을 배치해야 하고, 난민의 대량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치안 취약문제 등을 야기 시키며, 동북의 조선족 자치 지역의 안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

중국은 장기간의 평화와 안정된 국내 발전환경과 주변 안보환경을 필요로 하며, 목표는 조기에 국가통일과 '중화민족의 대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나, 중국 북부의 안보가 심각히 파괴되는 상황 하에서는 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경제적 방면에서 중국은 줄곧 북한의 주요 무역대상국이었으며, 1994년 이래 북한에게 무상으로 식량, 석탄, 원유, 비료 등을 제공하여 왔다. 중국과 북한 양국은 상호 우호협력조약, 통상항해협정, 항공운수협정, 영사협정 등 여러 가지 조약과 협정을 맺었으며, 또 매년 교육, 과학, 체육 등 부문의 교류계획에 서명하고 있다. 북핵 위기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과 북한 사이에 형성된 협력의 구도가 무망해짐은 물론이요, 중국동북의 옛 공업지역을 진흥시키겠다는 정책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중국정부의 북핵 문제에 있어서의 입장은 아주 명확하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며, 미국이 무력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

11) 항미원조(抗美援朝) 중국은 한국전쟁 시 개입을 항미원조, 즉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원조하기 위해서라고 강변하면서, 한국전쟁 개입을 정당시 하고 있다.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의와 미국, 일본, 한국 등 국가와의 현실적 이익을 고려해볼 때, 중국은 명확히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치지도의(置之度外)할 수 없다.

‘3자회담’과 ‘6자회담’이 좋은 예이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개입과 외교적 알선을 강화하고 있다. ‘6자회담’의 추진에 대해, 부시정부도 ‘중국의 노력은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을 증가시켰으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긴요한 대체적 역할’이라고 표명하였다.

### 3. 중국이 선호하는 북한 핵 문제 해결방안

중국은 대화와 담판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내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전략 환경과 국제 여론의 기초는 이라크와는 많이 다르다. 이라크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와 접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라크는 주위에 강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 강대국의 안보 및 전략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북한은 그렇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도발의 잠재력은 있으나, 이라크와는 달리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이점이 국제여론에 있어서 이라크와 다르다. 비록 한국, 일본, 미국 등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로 인하여 위협은 받고 있지만, 문제의 발단은 미국과 북한 사이 맺은 <핵 기본 합의서>상의 협의와 집행상의 문제로, 쌍방은 ‘법적 분류’ 차원이다.

또한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의 이익,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이요,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

도 관계된다. 이런 상황 하에서 미국은 당연히 한·중·러·일 등과 손을 잡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의 군사력이 미국의 무력적 해결에 대한 일종의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은 이라크의 군사력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이라크 군대는 제1차 걸프전 시 다국적군에 의해 대파되어, 제2차 이라크전쟁 전에는 무기와 장비가 열악한 40만 명의 병력 밖에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선군정치(先軍政治)', 4대 군사노선, 반세기에 걸친 군사력의 확장으로 현재 110만 명의 현역과 각종 신형장비로 무장되어 있다. 또한 한미연합군의 재래식 첨단무기 대해서 북한은 특수전 부대를 양성하고, 핵무기와 장거리 투발 수단 등 非對稱전력을 확보 또는 개발하고 있으며, 유사시 신속히 국가 동원 체제를 갖출 수 있다. 북한의 군사력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라크와 같이 그렇게 다루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핵문제는 북한에 있어서 김정일 개인 및 정권의 문제뿐만이 아니며 그 국가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다 부시정부가 비록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으나, 실제적인 문제에 당면해서는 실용주의와 功利主義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며, 현재 '대 테러'와 '이라크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전장을 연다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중국은 북핵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이라크 전쟁이 '악의 축'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시험이었으며, 미국의 매파에게 강심제를 주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되었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더불어 주한미군 기지를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밖으로 재조정하고 있으며, 동남아나 호주 북부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찾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미연합 체제를 벗어나는 것은 미국이 '유연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이는 최악의 경우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해 공중 타격할 할 것이라는 예시를 줌으로써 북한에 군사적 압력을 행사하고, 그 압력이 유효하지 못할 경우, 실제로 군사 행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방면에서 중국이 자신을 포함한 한국, 일본, 러시아에게 요구 하는 사항은 원론적이면서도 일관적이다.

‘한국은 햇볕정책을 지속해야 하며, 일본은 북한과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문제, 인질문제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중재자”와 변하지 않는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대화의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 아무 도움도 없고, 희망도 없으며, 이익도 없다는 전망이 서면 북한은 결코 가볍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핵문제가 어느 일개 국가가 나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오직 다자가 공동보조를 맞추어 상호타협하고 대화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미·중·러의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한·미·일과 중·러·북의 협상체제는 존재한다. 이 양 체제와 냉전 시대의 군사와 정치적 대치와는 구별된다. 이 양 체제의 공통의 목적은 바로 당면한 북핵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은 안보이익에서부터 하나하나 모두 상관관계가 있다. 한 미·일의 협상체제 중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설득하여 한반도가 통제 불능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중·러·북의 협상 체제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개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중·러·북 협상체제와 한 미 일 협상체제뿐만 아니라, 다자간 복합적인 협상체제가 성립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6자회담”이며, 이는 대화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환경과 조건을 창조한다.’(六方會談演繹大國三角關係의 내용 요약, <軍事博覽報>2003년8月19日)

결론적으로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두개의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하나는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의 공동 노력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이 공동으로 미국의 무력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중국의 多極化戰略을 시험하는 場이 되고 있다.

## VI. 결론

앞에서 이미 논하여 결론에 도달했지만, 중국의 대 한반도 안보 정책은 결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대로 귀결된다. 이전에는 현상 안주식(安住式) ‘평화와 안정’이었다면, 현재와 미래는 분명 추세 발전식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위상이 상승함에 따른 적극성의 표현이며, 이 적극성은 시대의 추이에 따라 더 구체화되고 더 무언가 하려는 시도[有所作爲]로 표현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국제정세를 보는 인식은 등소평의 세계대전 가피론에 근거를 둔 ‘평화와 발전’이며, 이 시기가 적어도 장기간<sup>12)</sup> 지속되어야 ‘3단계 발전 전략’을 완성하여, 국가 대전략 목표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룰 수 있다. 개혁개방이후 30년 가까이, 중국의 국력은 경제성장과 함께 눈부시게 발전되었고, 국제정치적 인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제 중국은 향후 50년간 ‘평화와 발전’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외부여건에 대한 수동적인 역할에서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하는 약간의 능동적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전환

12) “장기간”이란 말에 그 구체적인 기간을 중국 관리나 학자들은 애매하게 말한다 그러나 필자가 그들과 대화를 하거나 토론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장기간”이란 한계는 적어도 2단계 목표가 달성되는 2020년까지, 충분하게는 3단계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이 ‘中國威脅論’을 부추겨 외부환경을 악화시킬 것인지, 또는 마찰을 겪으면서도 전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인지, 이것이 한국의 안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를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중국정부의 정책과 그 행위를 분석할 경우,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과감히 탈피하여 오로지 중국의 이익에 근거를 두고 적극적 행보를 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또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자주, 평화, 통일을 내세우며, 주변 4강 중 어느 국가보다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중국 자체도 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삼고 있음으로 한민족의 주도적인 통일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중국은 한반도가 중립적으로 그리고 남북 쌍방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이행으로 통일되기를 희망하며, 통일 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한다는 가상은 중국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들다. 동북아에서 진정한 ‘多極化’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안으로 대두된 북핵문제 해결,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한국은 주변 4강의 역할구도를 한국 또는 한반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중국이 주변 환경의 ‘평화와 안정’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와 안정’ 시기를 적극 이용하며, 한 단계 격상된 남북대화와 교류를 통해 남북 쌍방이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 | 참고문헌 |

- 김달중·문정인·이석수 외, 2000, 「새천년 한반도 평화구축과 신지역질서론」,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신기욱, 1996, "South Korea Anti-Americanism: A Comparative Perspective" Asian Survey. Vol.36, No.8
- 이종석, 2004,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도서출판증심
- 최경식, 2005, "현대 중국의 대전략 변화 고찰" 「군사학 연구」 제3호,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소
- 江澤民. 2002, 「江澤民論有中國特色社會主義」, 北京, 人民出版社
- 江澤民. 2002, 「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 北京, 人民出版社
- 唐世平, 2003, 「塑造中國的理想安全環境」, 北京, 人民出版社
- 陳峰君主編, 1999, 「冷戰后亞太國際關係」, 北京, 新華出版社
- 叶自成, 2003, 「中國大戰略」,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張蘊岭主編, 2003, 「未來10-15年中國在亞太地區面臨的國際環境」,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叶自成, 2003, 「中國大戰略」,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金熙德, 2001, "南北峰會以來的朝鮮半島局勢" 「当代亞太」第10期
- 李愼明、王逸舟主編, 2004, 「2004年:全球政治与安全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新聞: 「人民日報」, 「北京青年報」 「解放軍報」 「中國青年報」 「光明日報」等。
- 李寒秋, 2004, 「朝鮮半島地緣政治格局和外交戰略框架」, [www.xsix.com](http://www.xsix.com)에서 인용
- 中國外交部政策研究 遍, 2004, 「中國外交2004」, 北京
- 中國外交部, 2000, 「中國政府白皮書(1), (2), (3)」, 北京

- Jusuf Wanandi, Autumn/1996, "ASEAN's China Strategy. towards Deeper Engagement", Survival. Vol.38, No3
- Shiping Tang, Fall/winter1999, "A Neutral Reunified Korea: A Chinese View",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seoul), Vol.
- Vadin Tkachenko, 1997, "The Consequences of Russia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Far Eastern Affairs, No.4

# The influence of Chinese multi-polarization strategy on the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Choi, Kyung-Sik

16th CPC National Party Congress established multi-polarization strategy as an external strategy, and 'The Great Reinvigoration of Chinese Nation' as the aim of The Great Strategy of China. It is required to maintain stabilized and peaceful surrounding circumstance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The ideal surrounding circumstance that China is aiming for is to achieve multi-polariza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while maintaining strategic deterrence. Multi-polarization now in 'One super Multi powers' is that 'Multi powers' deter 'One super' to prevent predominance of USA and to decentralize the power. China wishes to realign international order as it accomplishes multi-polarization.

China who wants 'Peace and Stabilization' emphasizes autonomy,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utonomy means the restraint intervention of foreign power, that is, American influence in Korean peninsula.

Multi-polarization strategy of China will be used in Korean peninsula to solv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to support neutral unification and to keep balance of power with USA, Japan and Russia as it renders economic advantages to South

Korea and security engagement to North Korea, based on special geographical, cultural and historical relationship with two Koreas.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will be a stage to test multi-polarization of China. When it deduces positive solution of nuclear issue due to successful six-party talks, and advances to security talks of Northeast Asia, it will contribute a lot to power and elevation of national stature of China in international society. Thus, the Chinese strategy will be an accommodative condition for the security of South Korea, and it requires wise decision of South Korea to make hay while the sun shine.

*Key words* : The Great Reinvigoration of Chinese Nation, Chinese multi-polarization strategy, Peace and Stabilization